

# 폐기물 재활용의 현황과 정책방향

홍준석  
환경부 폐기물재활용 과장

## 1. 서 론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래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가정의 주부들이 매일 부딪치는 문제가 재활용이고, 많은 수고를 들이게 하는 것도 재활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이 말그대로 제대로 다시 쓰이지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럴 바에는 애써 분리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비판하며 현행 분리수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유통체계의 미흡, 재활용 산업의 열악한 경쟁력, 그리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부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91년에 분리수거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제 만 6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재활용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본다. 물론 하부구조를 갖추지 않고 분리수거제도나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것에 대하여 정부가 비난을 면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분리수거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재활용의 필요성은 이를 통해서 소중한 자원을 회수하여 다시 쓰자는데 큰 목적이 있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재활용은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 매립과 소각등 환경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인 동시에 소비이다. 따

라서 개별 재활용사업자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되고, 현시점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내일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날로 심화되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NIMBY 현상에 따른 매립지·소각장 확보난을 감안할 때, 재활용의 경제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쓰레기 재활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이유가 있다.

재활용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쓰레기라도 현재 기술로서 재활용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경제성이다.<sup>1)</sup>

오늘의 기술로서는 재활용에 경제성이 없는 쓰레기가 기술발전에 따른 재활용비용감소나 원재료가격의 상승으로 내일에는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적으로 그 시대의 최적재활용율<sup>2)</sup> 이 존재한다. 현행의 분리수거지침은 구체적으로 계산은 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최적재활용을 개념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이 불완전 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이상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활용현황과 그리고 재활용이 부진한 원인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재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여기서의 재활용은 개별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재활용에 따른 편익에서 그 비용을 차감한 이익 또는 손실을 가리킨다.
- 재활용을 하여야 할 품목의 범위와 각 품목별 재활용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2. 재활용의 현황

### 가. 개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95년 현재로 1일 14만8천톤이 발생하며 이 중 45.4%가 매립되고 5.6% 정도가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49.0%인 7만1천톤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율은 61.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율은 23.7%로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이 35% 증가한 수치가 그렇다. 또한 23.7%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어 수집된다는 것이지 이 모두가 재이용 또는 재생이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수거된 재활용 품 중 30-50%가 다시 쓰레기 형태로 남아 배출되므로 순수하게 재이용되거나 재생이용되는 양은 전체 생활쓰레기의 10%내외로 추정된다.

### 나. 생활폐기물 품목별 재활용율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실시로 각 품목별 재활용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폐지와 폐유리병은 비교적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고 선진외국의 재활용율과 비슷한 수준이나, 금속캔과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은 낮은 편이다

〈표 1〉 주요 품목별 재활용율

품 목	소 비 량	회 수 량	회 수 율	외국의 회수율	
				일본( '95)	독일( '94)
폐지	6,887	3,662	53.2%	51.5%	59.3%
고철	36,772	12,879	35.0%	45.0	56.0%
폐유리병	891	446	50.1%	56.0%	54.0%
폐플라스틱	4,158	447	15.8%	26.0%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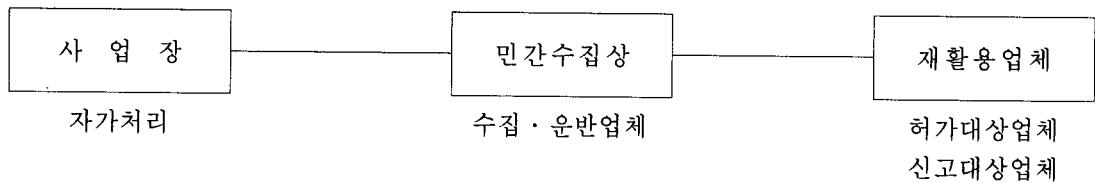
### 다. 재활용체계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의 수집·유통단계가 단순하고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다(그림1 참조). 폐기물자체의 순도가 높고 유통비용이 적으므로 재활용에 따른 수익성이 크며 따라서 재활용율이 높다(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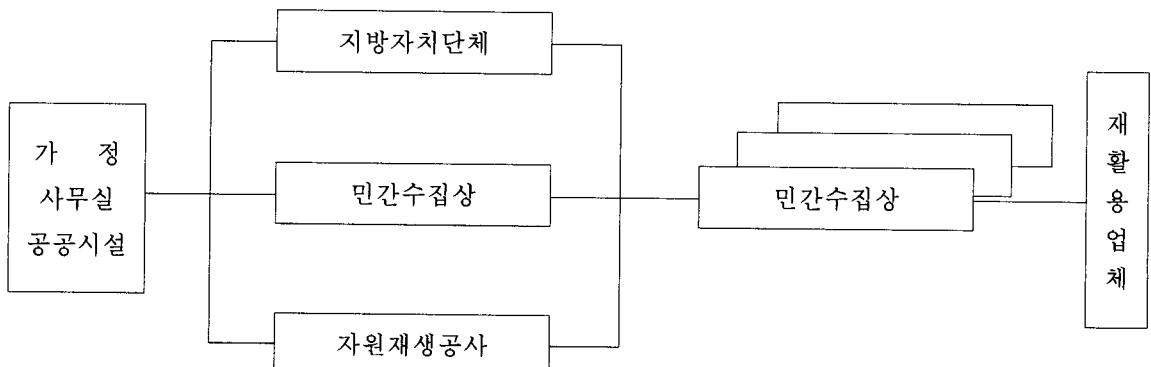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1차수집기능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수집상,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다원화되고,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집이후 재활용업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간수집상을 거치는 다단계적 유통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원가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 민간수집상이 영세하고 계절별 또는 경기변동에 따라 시장의 진입·탈퇴가 잦은 이유 때문에 재활용품의 가격변화가 심하고 중간유통단계에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유통구조가 불안정하다(그림 2).

### 라. 재활용업체

우리나라에는 약 2만개의 재활용 관련업체들이 조업중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사업장폐기물이 2400여개, 생활폐기물 관련업소가 17,000여개가 있으며, 16,000여개의 민간수집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지와 고철은 발생량에 비하여 재활용공장의 설비능력이 여유가 있으나 폐유리병은 재활용공장이 수도권과 중부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폐플라스틱은 전국적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1〉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체계



〈그림 2〉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체계

계		19,638
사업장폐기물	소 계	2,434
	○ 재생제품생산	1,853
	○ 수집운반업체	581
생활폐기물	소 계	17,204
	○ 생산업체	1,204
	- 폐지	136
	- 플라스틱	426
	- 폐유리병	89
	- 고철·금속캔	553
	○ 민간수집상	16,000

〈표 2〉 재활용업체 현황

### 3. 재활용이 부진한 원인

#### 가. 분리수거단계

분리수거는 재활용의 가장 기초단계이다. 분리수거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즉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차이가 나므로 저비용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재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분리수거체계의 구축을 위하여는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므로 부단한 홍보와 이해선득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야 할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되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선별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쓰레기는 결국 재활용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재활용의 경제성이 감식당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질분류표시를 하여 재활용여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없어 재활용이 안되는 열경화성 수지나 PVC, 혼합재질의 플라스틱이 분리수거되는 실정이다. 분리수거의 또 다른 문제는 종량제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재활용품이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나 이미 쓰레기 처리 수수료 면제형태로 그 만큼의 댓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댓가지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와 같이 재활용품에 지불된 수집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활용업체에 전가되어 그만큼 재생원료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

재활용품의 1차 수거기능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도 재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지역에 따라 고지·고철등 유기품목은 민간수집상이, 폐유리병이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품목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수거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드는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장비와 집하선 별장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sup>3)</sup>

#### 나. 유통단계(수집·운반·보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의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다단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과 유통마진이 재활용업체 재생원료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폐지의 경우 제지공장 납품가격의 60~70%정도가 중간상인의 물류비용과 이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재활용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다보니 물류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과 폐유리병은 재질 특성상 운송비 소요가 크고 재활용업체도 일부지역에 편중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지인근에서 처리되지 못하므로 재활용에 있어 물류비용비중이 매우 크다.

유통단계에 있어 또다른 문제점은 경기변동에 의한 수급의 불안정이다. 재생원료는 신원료의 대체재이므로 신원료의 수요변동에 따라 재생원료의 수요도 크게 변화한다. 그러나 민간수집상이나 재활용업체가 영세하여 충분한 비축시설과 자금이 없으므로 수요량이 늘면 가격의 폭등과 함께 재활용품을 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경기침체로 수요량이 줄면 재활용품이 적체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 다. 생산단계

재활용업체가 영세하여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 전국 3600여개의 재활용업체중 75%이상이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다. 또 용지가격이나 임대료의 부담 때문에 원료보관장소나 공장부지의 확보도 어려

3)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여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예치금대상품목의 경우 그 회수 책임을 제품생산자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거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워 수도권등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인근에 입주를 못하고 있다. 재활용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국토이용관리법등 각종 입지규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

재활용업은 신제품제조업에 비해 자동화하기가 곤란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특히 이 물질 제거나 색·재질 선별작업에 필요한 인력소요가 많다. 외국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각종 자동선별장치는 우리의 재활용품의 경우는 외국의 것 보다 장치의 센서를 교란하는 요인이 많아 장치개발에 경제성이 없다<sup>4)</sup>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 라. 소비단계

재활용산업이 번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재활용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재활용제품이 일반 신제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별로 싸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 인식이다. 우선 소비자를 입장에서는 어떤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 가격은 어떻고, 품질은 어떠한지 정보 얻기가 어렵고 또 안다해고 판매장소가 일부 백화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데에는 품질을 대한 확신도 없고 하자 발생시 애프터 서비스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체제가 없어 선뜻 구매에 나서지를 못한다.

재활용제품을 만드는 기술도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현재 적체된 폐플라스틱이나 폐유리병 등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건설자재나 건축자재 등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물론 이러한 기술개발도 재활용제품의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건설공사에 쓰이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도입과 함께 구매의무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부의 재활용대책의 기본목표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형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재활용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분리수거체계를 정비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하며, 생산공정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재활용제품이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소비촉진대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활용산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사업으로서 수익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산업이 수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방식은 재활용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재활용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위여건을 조성하는 간접지원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직접보조는 기업의 자생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체간의 형평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재활용사업인데도 수익성이 너무 약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인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참여를 억제하여 민간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부지확보지원, 세제·금융지원, 판로개척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이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갖추어 민간 기업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가. 분리수거체제의 정비

분리수거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능률적인 재활용체계를 갖추는 관건이 되고 재활용산업의 원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종량제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배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분

4) 재활용품의 순도 또는 품위가 낮음을 말한다. 유리병 색선별장치의 경우 병뚜껑, 유색병등 너무 많아 센서의 에러(error)가 많아 제대로 분류가 안되고 다시 이를 인력으로 선별하여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리수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분리수거요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제품생산업체 자율에 맞겨져 있는『재활용가능마크』표시를 의무화하고 『재활용가능마크』가 부착된 포장 또는 용기만을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이 분리수거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수거 가이드북 같은 것을 각 가정에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분리수거요령은 전국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용품 수거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장비와 인력 그리고 집하선별장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가 집하선별장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민간수집상 등에 의해 중간가공을 거쳐 또는 직접 재활용업체에 유통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거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 나. 재활용폐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

재활용품의 경기변동에 따른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는 수급조절기능을 활성화하는동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품 유통 민간업체가 영세하고 채산성도 맞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8개권역에 재활용폐기물 비축시설<sup>5</sup>을 확충하는 한편 정부부담으로 비축자금을 조성하여 가격이 떨어질 때 재활용폐기물을 매입하고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폐기물을 방출하는 가격조절과 물량조절기능을 수행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한다.

5. 권역별로 12~18천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비축시설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영세 재활용업체에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활용업체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비축품목을 특화함으로써 재활용폐기물의 시간적·공간적 수급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비축에 의한 수급조절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의 유통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용품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의『재활용유통정보센타』를 확대 개편하여 사업장폐기물의 교환이용만을 앞선·중개하던 것을 모든 재활용폐기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9개 지사단위의 지역유통정보센타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폐기물교환, 관련기술정보제공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소망을 활용하여 주요 재활용폐기물의 지역별 가격동향과 거래물량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재활용폐기물『유통모니터링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활용 품목별로 사업자단체 구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재활용폐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다.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용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부지확보문제이다. 정부가 재활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업체에게 싼 값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 생각한다. 수도권 매립지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대단위 재활용 종합산업단지 조성하는 방안과 전국 3개권역에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분양받아 이를 재활용업체에 장기 염가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계속 확대한다.『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와 한도액을 확대하고 재활용기계·기구 수입시에 관세감면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폐자원 수집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품목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예치금 제3자 지급 규정을 고쳐서 재활용업체가 예치금대상 품목중 전체 물량의 1%이상을 회수·처리하면 미반

환된 예치금중에서 해당 예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재활용제품의 다양한 용도개발과 저비용의 생산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투자·연구를 확대하며 재활용업체의 창업지원과 인허가 업무대행 및 기술상담을 해 주는『재활용창업지원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재활용업체 혼자만의 힘으로 제품 판로개척등 마케팅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판매 광고를 대행하여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sup>6)</sup>

## 라.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재활용제품 사용에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뜰시장과 재활용품 유통센타의 설치를 확대한다. 재활용품 전시, 중고품 수리 교환 판매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재활용제품의 인지도를 높히기 위하여『재활용제품상설전시관』도 곧 개관할 계획이다.

재활용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려면 우선 재활용제품의 적정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공산품의 품질규격으로 KS등이 설정되어 있으나 재활용제품이나 업체의 특성상 품질인증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재활용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공장설비등 현장검사기준은 완화되되, 일정품질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부터 재활용제품 사용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적정 품질과 공급규모를 가진 전자복사용지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재활용제품사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중심으로 의무화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특히 정부가 벌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보도블럭이나

6. 제품 광고, 수요처 발굴, 지역별 공동점포개설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상품판매대행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건축외장재를 중심으로 재활용건축자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5. 결 론

재활용은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재활용을 경제적 논리와 사업의 채산성 잣대로만 보면 재활용 사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을 떼어야 한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해야 하는 것은 재활용이 야말로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 매립과 소각등 환경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인 동시에 소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재활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을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은 귀찮은 일이고, 재활용제품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고 아끼는데 보탬이 된다는 인식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재활용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기업도 이들 업체와 그 제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품질과 가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비교하여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재활용업계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